

# 민생경제 원탁회의... '경제 살리자'

### 도내 43개 경제관련 기관장 참여... 조선업체 지원방안 협업토론 · '한가위 큰장터' 장보기행사

도내 40여개 경제관련 기관장들이 한데 모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전북지역 경제관련 기관장 43명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지난 9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전북도 주관으로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 등 경제관련 43개 기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지역경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역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기관별 시책설명과 협업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책설명으로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의 '전북 우수농축산물 애용 홍보협조'와 전주지방중소기업청 '은 누리상품권 구매 활성화', 전북지방조달청 '창업초기기업 판로지원', 전주 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지도단속 안내' 등이 기관별로 논의됐다.

협업토론에서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조선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군산지역 조선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인 대출금 지원 한도 상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전북지역 경제관련 기관장 43명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지난 9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들은 군산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계획조선 물량확보 지원과 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 중소기업은행 공동수주 지원, 전기요금 납부유예·면제 건의, 산업용전기요금 인하 건의, 4대 보험료 납부유예 건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에 대해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

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형규 도 정부부지사는 "군산 지역은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이들 업체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영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각 기관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이날 민생경제 원탁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도청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는 전북에서, '우리고장 상품'으로 주제로 한 캠페인과 '한가위 큰장터'에서 장보기 행사에 참여·구매한 상품을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고민형 기자

## '제6회 전북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 군산시, 집행부 도시 선출

2016~2018년 임기... 3회째 연임

군산시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전북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에서 집행부 도시로 3회째 연임됐다.

(본보 9월 9일자 1면)

군산시는 지난 8일 열린 UCLG-ASPAC의 기구운영에 관한 회의에서 2016~2018년 임기의 집행부 도시로 다시 한 번 선출되어, 지난 4년간의 UCLG ASPAC 집행부 도시로서의 활약을 통해 국제사회 내 군산시의 입지와 신뢰를 재확인 받았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임인 도시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와 전지구적 의제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선도를 통한 국제 커뮤니티 속의 키 플레이어로서 글로벌시티 군산을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UCLG에 정식가입한 군산시는 지속적인 회의 참가를 통해 각종 우수사례와 정책에 관한 발표를 통한 국제기구활동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여왔고, 이번 집행부 도시로 재선출된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됐다.

또한 이번 총회를 위해 군산시는 '군산 문화예술의 밤' 개최, 전통 차 및 다식 만들기 체험, 한글캘리그래피 체험, 전통 고전머리 전시 등의 부대행사 개최, 국내외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한 야간 셔틀버스 및 관광 안내데스크 운영 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번 총회는 지난 5일부터 시작하여 8일까지 4일간 '새로운 도시 어젠다 = 지역·생명·문화'라는 주제 하에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140개국 10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연합의 임인 도시로서 앞으로 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국제기구에 대한 공헌을 통해 국제사회 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 14·15일 KBS-1TV 통해 추석 특집방송 방영

### 중국 '리준' 우승... 베트남 '응우옌 당 안' 우수상

전북에서 진행된 '제4회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가 추석 특집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입맛을 돋우게 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해외 및 도내에서 개최한 한식요리 경연대회인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KBS-1TV를 통해 방송된다.

국내 본선 진출자 20명은 지난 7월 13일부터 6일간 전북 한식캠프에 참가해 전통한식조리법과 고추장 만들기, 비빔밥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받았다.

이어 캠프 마지막 날인 7월18일에는 전주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준결승전을 펼쳐 최종 5인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최종 결승전은 KBS 여의도 공개홀에서 20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추장을 이용한 3첩 한상차림'을 주제로 경연을 펼쳐 중국의 '리준'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또 우수상에 베트남의 '응우옌 당 안'이, 장려상에 러시아의 '빠벨 김'이 선정됐다.

우승자는 미화 1만 달러, 준우승자는 3,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졌다.

도 관계자는 "해외 예선부터 전북도 한식캠프를 비롯한 준결승, 결승까지 다채롭고 흥미롭게 재구성돼 콘테스트 방송을 통해 글로벌 한류의 중심인 전북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도, 규제역·AI 방역 강화

전북도가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해 규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9일 도에 따르면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고 축사 소독을 하는 등 규제역과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이에 24시간 상황 유지하고, 방역지원본부의 전화에차요원을 동원해 농가 지도에 나선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및 연수생 등에 대해 방역홍보도 강화하고, 축산농가 및 종사자의 해외여행 지침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축협 공동방재단을 동원해 취약지역 및 농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1

## 김영란법, 시간강사 2018년부터... 프리랜서 언론인 제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직자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안내서에 이어 교직원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직종별 안내서도 공개했다.

교직원과 언론인도 기본적으로 공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권익위는 다만 업무 특성상 적용 대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예상되는 데 따른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기관은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 398개다. 또한 사립학교 법인 1,211개도 적용대상이다.

기본적으로 각 학교 장과 교직원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중·고교의 기간제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1월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의 지위

## 교직원·언론인 직종별 안내서

를 부여받게 돼,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들 업무 특성에 따른 처벌 기준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 교사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교장은 물론 부장한 청탁에 따른 업무를 거절하지 않은 담임교사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부정청탁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성적을 올려주면 해당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 선물하거나,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나 체험학습 때 간식을 제공하는 것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서도 냈다. 방송·신문·잡지·뉴스통신·인터넷신문사업자 임직원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다만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국 외주제작사 임직원, 포털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PD, 기상캐스터, 앵커 등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취재 과정에서 제공받게 되는 각종 편의에 대한 유권해석도 내렸다. 공연담당 기자가 취재를 목적으로 기획사로부터 5만원 이상의 표를 제공받을 경우 제재 대상이다.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하의 점心和 저녁, 다음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와 선물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원과 식사를 할 경우 식사 외에 주류와 음료수도 모두 합산해 3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외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이 기자에게만 숙박과 항공편을 제공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1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